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김정은 체제의 지식경제형 강국 논문에 대한 토론문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고난의 행군 이후 ‘수령-당-인민대중의 통합체계’ 이원화

- 경제적 운명공동체는 붕괴, 하지만 정치적 운명공동체는 여전히 유효
 - 실리주의(시장) 도입이 수령-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실리주의(시장) 도입 또는 승인이 수령-당의 ‘시혜’로 느껴져야 하는데 실리주의(시장)은 인민대중이 개척하고 선도해 온 영역임
 - 따라서 화폐개혁 이후 실리주의(시장)에 대한 이원화된 주체가 형성됨. 인민대중 또는 자생적 시장자본세력이 계속 확장해나가는 장마당 또는 종합시장의 영역과 광복거리상업중심(대형쇼핑센터)과 같이 당이나 정부가 주도해가는 (유통)시장의 영역이 경쟁체제를 형성
 - 특히, 광복거리상업중심과 같이 대형 소비재 유통시장에 당 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종합시장과 장마당의 시장세력을 견제하면서⁴⁸⁾ 동시에 소비재 유통망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됨.
 - 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체제가 형성되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음. 왜냐하면 상업중심은 당 또는 정부가 개입되는 준(準)국영유통망인 반면

48) 조선신보(2012년 1월 24일), “마지막 현지도 광복지구상업중심, 사회주의수호자가 돌아본 인민적 시책의 현장” 기사 보도 내용 중 “상업중심과 같은 상점이 많으면 시장도 필요없다고 하고 있다. 이게 다 장군님께서 현지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다” 에서 상업중심의 운용 목표 중 하나에 시장 확대 역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 종합시장의 운영은 지방정부의 영역임. 결국 상업중심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세금은 중앙정부로, 종합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세금은 지방정부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만일 상업중심과 같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소비재 유통시장이 전국 주요 도시에 도 진출하게 되면 종합시장과 경쟁체제가 형성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을 매개로 한 이윤배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정은 시대의 수령-당-인민대중의 통합체계는 부재하고 고도의 억압체계만 존재 주장

- 최근 김정은의 현지도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위양식의 특징은 ‘스킨십 통치’ , ‘소통 통치’ 임. 이것은 김정은이 인민의 영도자로서 반드시 획득해야 할 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얻기위한 김정일과 차별화된 상징 전략이자 고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 모방 전략임

2. 김정일과 김정은 간의 권력 역설 현상

-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 갈등 현상의 대표적 현상으로 김정일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대조적으로 군부 단독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진행했다는 분석
- 김정일의 승인없이 김정은이 배후에서 독자적으로 군부 세력을 움직여 군사적 도발을 했다면, 사후 김정일이 책임자를 처벌했어야 했겠지만 관련된 군부 세력은 오히려 승진함(김영철, 김격식 등). 따라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김정일과 김정은 간의 권력 갈등 현상의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김정일은 단기간에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장 고심.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김정일 사후에도 3대 권력 세습이라는 국제적 비난 여론을 막아주고 내부적 소요나 외부의 물리적 공격을 막아주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까지 해 줄 수 있는 대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5월 이후 세 차례의 중국 방문과 러시아 방문이라는 강행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 또한 내부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과 군 모

두의 요직을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김정은에게 부여함

- 따라서 김정은은 자신이 부친과의 권력 이양과정에서 경험했던 권력 역설 현상을 염려했다기 보다 단기간내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엇보다도 고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실제로 김정일 사후(死後)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유일적 영도체계 수립과정)은 김정일 사전(死前)에 철저하게 기획되어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3.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 영역에서 야기될 가능성 큼

- 대체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는 듯 보임. 정치영역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이 당, 군, 정, 사회(인민대중) 모든 부분에서 선대 지도자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유일적 영도체계를 수립할 수 있느냐가 불안정 요소의 핵심임. 이것은 섭정정치 또는 집단적 영도체제와 같은 이견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함
- 하지만 유일적 영도체계이든 분권통치체계이든 김정은을 내쫓고 대신 권좌에 오르려는 반대 정치세력 또는 전복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경제문제는 간단치가 않음
- 김정은이 인민대중으로부터 자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결정적 관건은 ‘인민생활향상’에 있음. 하지만 경제 영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함남의 불길’, 지식경제형 강국임. 이것은 김정일의 유훈을 빌어 내부적으로 예비자원을 쥐어짜내는 자력갱생식 개발모델이거나 아니면 의식주 해결도 힘든 인민대중들에게 CNC화라는 과학으로 포장한 허위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함
- ‘함남의 불길’은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 행사(4.15 태양절) 준비를 위한 과거의 속도전의 또 다른 변형에 불과. “함남의 불길에는 당이 준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하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구현되어있다. ……함남의 불길은 자기 고장, 자기 일

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려는 선구자적기질의 발현이다. 모든 초소와 일터, 모든 도, 시, 군이 함남도에서처럼 혁신을 일으키고 정체 인민이 함남도 사람들처럼 일해나갈 때 2012년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 강성국가건설이 앞당겨질수 있다.⁴⁹⁾

- 인민생활향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재 생산에서 제기된 방안 역시 주체화, 국산화와 같은 내부 예비 동원 방식임.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원료, 자재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는 것이다. 원료, 자재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한다는 것은 자체의 자원으로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4. 지식경제형강국 이데올로기가 주는 허위 두 가지

- 첫 번째 허위는 민수공업으로 전화가 부재한 국방공업 중심의 지식경제산업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 허위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는 노동력 절감이 아니라 유희 노동력(‘남는 노력’)의 활용임

- 북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엄청난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형 산업의 정상화 또는 육성 방안으로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하나 ‘무인화’ 또는 ‘노동력 절감’의 지식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문제는 절감된 노동력(‘남는 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남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CNC화된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남는 노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⁵¹⁾

- 최근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CNC화는 국방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기술에 불과. CNC화 성공 신화로 대변되고 있는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은 군수공장임.

- 김정일 정권 출범 초기에 강조되었던 기술중시사상의 변형된 형태의 이데올로기에 불과. 김정일 시대에 강조되었던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우대해야한

49) 사설 “위대한 장군님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 『로동신문』 (2012년 2월 9일) 1면
 50) 리명희, “현시기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57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1, p.71.
 51) 주은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의한 남는 로력형성의 중요형태” , 『경제연구』 2011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4-15.

다는 논리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됨.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정확한 실시는 일을 적게 한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한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분배몫이 차례지게 하는 과정일뿐 아니라 숙련로동, 기능로동에 참가하여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분배몫이 차례지게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여 지적로동, 지능로동으로 나라의 과학 기술과 생산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 현대과학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여 실적을 올린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보수가 차례지게 하는 과정이다.”⁵²⁾

52) 김미란,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는 생산장성의 큰 예비이며 생산돌격의 추동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57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1, pp.67~68.